

# 이재명 9월 본회의 없는 주에 출석... 검찰 조사 정면 돌파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11일~15일 조사 유력 추석 전 영장 청구 가능성... 체포동의안 처리 '긴장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른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이 맞물리면서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내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각각 21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내달 말인 추석 연휴 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 대표가 통보한 것"이라고 말해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제3차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금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른바 24일과 26일에 조사를 받았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이날까지 양측은 정확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9월에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과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대표가 재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것은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야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정치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면서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칼날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장 검찰이 이 대표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진영과 비명 진영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이재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도부 구성 등을 놓고 당내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9일까지 진행되는 강원도 원주에서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어떠한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정국의 초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이에 따른 이 대표의 신병 문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광주서 국힘 2만 책임당원 시대 열겠다”

###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취임... “세 확대 통해 호남 목소리 내야”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28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광주시당 책임당원 2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내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당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세력 확보에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의 광주와 전남 책임 당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세 확대를 통해 앞으로 당내에서도 호남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한 달 만에 1만명 책임당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기존 지지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지지층 확보를 통해 광주발전을 이끄는 대안정당, 더불어민주당 견제세력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앞장서 광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다”면서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



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이끌어 내, 지역구 1석 이상 당선시키겠다”며 내년 총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특히 “중앙당과 대통령실과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과,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일관된 지지 세력과 민심을 한데 모아 내년 총선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또한, “미래 광주시당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당 내에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어 정치 신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면서 “젊은 층의 정계 진출 통로를 만들고 지역 소외를 막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국방부 흥범도 흥상도 이전 검토...野 “정부, 제정신 인가”

### ‘공산주의’ 전력 문제 인식...민주 “독립운동가에 모멸감 주는 행위”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흥범도 장군 흥상의 이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현 정부의 ‘극우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흥범도 장군 흥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흥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던 전력을 고려할 때 흥상을 국방부 등에 설치해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나 북·중·러 밀착을 경계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 등의 흐름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혁명 음악가 정용성을 기리기 위한 광주시의 공원 조성에 정부가 명확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부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국 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흥상 설치 등) 다 진행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여과가 되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흥 장군 유해 봉환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중북 서훈과 흥상 설치가 연달아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기존의 흥범도 흥상을 독립기념관 내 전시 공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독립운동 역사에 이념을 덧씌워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흥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흥상을 철거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에 모멸감을 심어주는 행위”라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고 언급했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그런 한심한 일을 건의하는 답대거리 참모들이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은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육사 교장서대 통령실 위기관리센터장 출신임을 상기하며 이번 결정에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흥상 이전의 근거로 흥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에 있는 점 등이 꼽히는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세기 ‘한국판 매카시즘’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다”며 “극우 본색이라고 저하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용천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사는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점으로 급격한 몰락의 길로 들어선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중요농업유산 보전위한 직접지불제도 신설

### 김승남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



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 현대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